

매년 산재 사망·부상에도 안전대책 대신 '땀질 처방'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드러나는 안전불감증

현대산업개발 5년간 11명 사망·6년간 244명 부상 등 산재사고 연이어 백출건설 직접 고용 3명 '미니 회사'... '서류 따로, 공사 따로' 안전 소홀 공사 비용 줄이기에만 관심... 동구청은 사고 당일까지 현장 점검 없어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국회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고질적 안전불감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당 재개발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를 맡았던 현대산업개발 사업장에서는 최근 5년간 1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고, 건물 철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행한 백출건설에 직접 고용된 인원(고용보험 가입자 수)은 사장을 포함해 3명이 전부인 사실상 '미니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관련 기업·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 최근 6년 동안 사고재해자만 244명=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14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 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의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2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8명(2016년) ▲14명(2017년) ▲78명(2018년) ▲86명(2019년) ▲40명(2020년) ▲18명(2021년 3월) 등으로, 2019년까지는 급증세를 보이다가 다소 줄긴 했지만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강 의원은 "사업장 안전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땀질식' 대책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업장 내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발생했다. 현대산업개발 사업

장에서는 2016년 1명이 사고로 숨진 데 이어 4명(2017년)→2명(2018년)→4명(2019년) 등으로 산재 사망자가 잇따랐다.

◇직원 3명 뿐인 회사에게 맡긴 안전=강은미 의원은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사고 당일 철거를 맡았던 백출건설은 3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받은 사업장별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확인한 결과, 백출건설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지난 5월 기준 3명으로 지난해 5명에서 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굴착기 기사인 사장 1명을 포함, 3명 뿐인 '미니 회사'가 일이 생길 때마다 일용직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안전설비·교육에 투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안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소홀하다보니 감독 당국에 제출할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서류 따로', '공사 따로'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안전보다 비용 중시=강은미 의원이 공개한 '붕괴사고' 관련 철거계획서는 안전보다 공사 비용을 줄이는데 관심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인다. 이런 계획조차도 무시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철거업체가 제시한 철거방식은 '성토 압쇄공법'으로,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철거하려는 건축물 옆에 흙더미를 건물 높이만큼 쌓고 굴착기를 그 곳에 올려 고층부터 철거하는



"친구야 하늘에선 편히 쉬렴" 눈물의 배웅

14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철거건물 붕괴참사로 희생된 고등학생의 발인식이 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방식으로 6층(건물 높이 18m) 이하 건물 철거 때 주로 사용된다. 수직으로 건물을 뜯어내 속도가 빠른 반면,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구조물에 쇠줄을 걸어 건물 안 쪽으로 넘어지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없었다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여기에도 계획서에 명시한 대로 고층부터 철거하지 않고 3층부터 철거하는 등 계획서 따로, 공사 따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를 그때그때 쓰다보니 작업 안전교육도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경

찰과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감독 당국, 소홀한 현장 점검=동구청의 소극적인 건설현장 안전 점검도 확인됐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 동구는 철거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난 14일 이후 사고 발생일까지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광주일보 6월 11일 3면> 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상 지자체 등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또

건축사사무소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별도의 기관에 대행을 맡길 수 있다.

동구는 그러나 안전 우려 민원을 받고도 공문을 보낸 것 외에 현장점검이나 대행 기관을 통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참사 2개월 전에는 "철거 현장 바로 옆이 행인과 차가 다니는 도로여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민원도 제기됐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계획서와 다르게 아랫층부터 철거 '안전 부실' 운암동 재건축 시공사·하도급업체 4곳 고발

북구, 긴급 안전점검서 적발

철거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철거 공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안전 조치를 부실하게 한 지역 재개발사업 현장이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안전을 무시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광주시 북구는 14일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 사업장 내 해체공사와 관련,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총 4곳을 고발조치했다.

북구는 지난 12일 현장 점검을 거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과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문안환경을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북부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업장 안전 감독 의무 감리자에 대해서

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구는 제출된 철거해체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철거공사가 진행된 점 등을 토대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철거계획서는 고층부터 해체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상부 하중을 분산하는 지지대를 설치해 작업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정작 공사는 아랫층부터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북구 설명이다.

북구는 또 철거되고 남은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보완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북구는 오는 18일까지 관할 구역 내 다른 지역 주택조합, 재개발지역, 소규모정비사업 등 17개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 항소심 재판 역시나 불출석

다음 재판 7월 5일 열려

전두환(90)씨가 끝내 항소심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

상 출석의무가 있지만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날도 법정에서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결석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형소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즉시 판결하거나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진

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전 대통령인 박근혜도 출석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했다"며 "특별하게 검토하겠지만 오늘은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각각 항소의 이유를 밝히면서 사로의 항소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측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많은 시간(96분)을 할애, 검사와 재판부의 항의, 제재 발언이 잇따르기도 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7월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내·딸 살해 혐의 나주 40대 가장 구속

10세 딸과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나주경찰은 14일 아내와 딸을 숨지게 한(살인)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5시 30분께 나주시 남평

읍 한 아파트에서 아내(40)와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다. 발견 당시 아내와 딸은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아내와 딸이 숨진 것을 확인 한 뒤 술에 특정 약물을 넣어 마신 후의

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아내와 딸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실책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A씨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와 평소 아내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고민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